

#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尹 즉각 퇴진하라”

●시·도지사 5명 공동성명

### 姜시장 “5월 아픔 기억 광주시민들 결코 용납할수 없어” 金子사 “피·땀으로 만든 민주주의 우리 손으로 지켜내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5개 시·도 광역단체장들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즉시 퇴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실패한 쿠데타’라며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질 자격과 능력이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80년 5월엔 목숨을 걸고 전두환 군부 쿠데타에 맞섰고 박근혜 정권 당시엔 촛불을 들어 대통령 탄핵을 이끌었던 민주시민들이 지난밤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또 한 번 쿠데타 시도를 막아냈다”며 “이것이 대한민국의 힘”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또 “80년 5월 광주의 아픔이 대한민국 민주화로 승화됐던 것처럼 지난밤의 위기도 대한민국 민주주의 성숙

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명백한 위헌이자 무효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헌정 질서 파괴의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5개 광역단체장들은 “시·도민의 일상의 안전과 민생을 더욱 든든히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강기정 시장은 이날 오전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광주시민 비상시국대회’에 참석해 “반헌법적이지자 명백한 불법”이라며 “계엄의 밤이 지나고 이제 심판의 시간”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강 시장은 “80년 5월의 아픔을 기억하고 경험했던 광주시민들은 이 상황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또 자신의 SNS에 “대통령의 ‘총동적 쿠데타 시도’가 시민과 국회의 힘으로 좌초됐다”며 “이것이 대한민국의 힘이다. 시민의 일상은 지켜내고 윤 대통령에게는 책임을 묻겠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5개 광역단체장들이 4일 오전 수원시 국회의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에 따른 대응책 논의를 위해 만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전북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수원시 국회의장, 김동연 경기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광주시 제공>

김영록 지사도 이날 오전 도청 서재 필실에서 긴급 현안회의를 열어 “도민들이 뚝 없이 생업 현장에서 자리를 잘 지켜주고, 공무원들도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는 참으로 당혹스럽고 참담하기 그

지 않다”며 “민주주의가 참혹했던 1980년 이전인 군사정권 시절로 후퇴한 것으로 수십년간 쌓아온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상계엄이 해제돼 다행”이라며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지사는 한일해협연안 사·도·현 교류지사의 참석 차 5일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행정부지사를 대참도록 하고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해 민생 현안을 직접 챙길 계획이다. /김재정·변은진 기자

## 광주·전남 지방의회 “내란 주도尹, 즉시 하야”

시·도의회, 전남 기초의회 성명...탄핵 소추·대통령직 파면 촉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 광주·전남 지방의회가 대통령직 퇴진을 촉구했다.

광주시의회·전남도의회는 4일 공동성명을 통해 “내란을 주도한 윤 대통령은 즉시 하야하라”고 촉구했다.

시·도의회는 “국회의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령은 해제됐지만 국민의 기본권과 주권을 침탈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민을 위협하려 했던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들에게 용납받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도의회는 “완전 균장을 한 채 국회의사당 창문을 깨고 난입한 계엄군의 만행은 1980년 5월 전남도청에 진입한 공수부대를 떠오르게 한다”며 “이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헌정 파괴 범죄”라고 강력 규탄했다.

그러면서 시·도의회는 “계엄법 제2조 제5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이는 절차법적으로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전남지역 기초의회도 윤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나섰다.

목포시의회는 성명을 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헌법을 훼손한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윤 대통령은 헌법 절차를 준수해 사회질서 유지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보성군의회도 “국민의 신뢰를 잃은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자격이 없다”며 “즉시 자진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무안군의회는 “계엄령 선포는 명백히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 폭거”라며 “비상식적 폭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강진군의회도 이날 본회의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윤석열 정부가 더 이상 국민을 농락하고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헌정 질서를 유린한 윤 대통령은 법의 심판을 받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함평군의회는 “윤 대통령은 이미 계엄 선포와 함께 대통령 자격을 상실했다”며 “반드시 책임을 엄중히 묻어 즉각 하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정·변은진 기자

## 민주 시·도당 “국민 겁박한 ‘정치 쿠데타’...자유민주주의 수호”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전남도당은 4일 “국민을 겁박한 명백한 ‘정치 쿠데타’”라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시·도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로 45년 만에 민주주의가 또 다시 위기에 처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 요건에

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군사반란을 획책할 의도가 아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계엄 선포는 원천무효이며 내란죄, 국가반란죄에 해당한다”며 “독재자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시·도당은 또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저버린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

으로서 자격이 없으며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도당은 “군 병력을 동원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 본청을 무력으로 점거하고 국민에게 공포를 조장했다”며 “국회는 즉각적인 탄핵 소추를 결의하고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라”고 강력 요구했다. /김재정·변은진 기자

## 광주전남기자협회 “5·18 비극 소환한 윤석열 사퇴하라”

광주전남기자협회가 위헌적인 계엄령 선포로 5·18의 비극을 소환한 윤석열 대통령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전남기자협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아직도 아픔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광주·전남 시민과 기자들에게 다시 트라우마를 안긴 윤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협회는 “한밤중의 계엄령 발표로 광주는 45년 전을 떠올렸다”며 “매년 5월18일마다 상기되는 비극이 다시 한번 눈앞에 펼쳐졌다”고 비판했다.

기자협회는 “말로만 들던 보도 통제가 관 뚜껑을 열고 되살아났다. 고립된 광주에서 기사를 난도질당하던 선배 기자들의 기분이 이랬을까”라며 “그

결과로 주요 언론사에 불에 났고, 언론 자유의 깃발을 다시 세우기 위해 수십 년이 걸렸다”고 강조했다.

기자협회는 윤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며 “광주·전남 기자들은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지키는 최일선에서 국민과 함께 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재만 기자

## 남도밥상을 지키는 사람들

| 잊혀져 가는 남도음식의 맛과 멋을 총망라!  
남도음식의 산업화·세계화를 위한 기폭제 마련!

남도는 맛의 고장이다. 기름진 땅과 맑은 물에서 고운 햇살을 받으며 자란 청정 농수산물과 넉넉한 인심으로 맛갈스런 맛을 낸다. 이런 남도 음식중에서도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향토음식을 엄선해 그 가치와 비법 등을 소개했다. 남도 음식의 새로운 진면목은 물론 산업화·세계화를 기대하면서~

구입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8)  
입금계좌 광주은행(016-107-323257:예금주-(주)광주매스컴)  
정 가 20,000원